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촉구 결의대회'에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인재 양성, 남원이 최적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국회 결의대회

지역·영호남 국회의원 다수 참여… 힘 실어줘
토론회서 교통 접근성·비용 절감 등 근거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4일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윤준병)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촉구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남원시를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로 선정하기 위한 범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설득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박희승 국회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등 비롯해 전북지역 및 전북 연구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애함본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출향 도민과 지역사회단체도 참여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북도민 2,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창운 한국경찰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병현 지방시대위원회 5국3특 특별위원장, 윤태웅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남원시의 교통 접근성, 국유지 중심의 부지 구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근거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임을 주장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남원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도 설명했다.

경찰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보지별 비교분석 용역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남원 기간 남원 입지의 우수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정치권과 경찰청을 설득할 계획이다. 도와 남원시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며 논리를 축적해 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남원 입지의 장점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기조 아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국에 확산시키며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이 지역균형발전의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한우산업계 ‘반색’

민주 이원택 의원 발의… 21대 시절부터 추진해온 입법 과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지원 명문화
尹정부 거부권 행사 후 재발의 등 끌여오면서 3년만에 결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 김제, 부안)이 지난 2022년 21대부터 끈질긴 사업으로 발의했던 한우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뒷심을 발휘해 국내 및 도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한우 축산 농가들이 시름을 놓게 됐다.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국내와 도내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우법이 국회 본회를 전격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한우농가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생산인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한우법을 처음 입안한 이후 △한우관련 단체들과 연속적 간담회 개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촉구 △윤석열정부 거부권 행사이후 재발의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전 과정을 끌여오면서 3년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의 근간이며 현실을 대변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국민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며 “법안의 국회통과로 입법화되면서 한우농가의 생존권 및 이와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도, 금융·복지 복지복지지원서비스 본격

찾아가는 금융상담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안정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복지 복지지원 서비스 사업'을 4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의하여 '찾아가는 금융상담센터'를 4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남원, 진안,

고창, 김제, 정읍, 완주 순으로 전북신보 시군지점에서 시범 운영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의 도민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관 간 직원 교차교육도 병행된다. 최근 부안군 사회복지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수요를 반영해 연중 수시 확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확정 |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항목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원전 입지 지자체와의 연대(원전동맹) 활동 등을 이어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으나, 전북의 고창·부

안군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내 재정지원 항목 신설안을 확정 반영했으며, 관련 교부세법

시행규칙은 11월 중 입법예고 후 공포·적용될 예정이다.

재정 규모는 '원전 소재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지원시설세 배분금액'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된다. 한빛원전 기준 기초지자체 1개소 배분액은 지난해 약 29억원, 올해 약 24.6억원이었으며, 고창·부안도 내년부터 동일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만호 기자

